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07호

경기도 공무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2.
경 기 도 지 사

1. 개정이유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완료 및 상시·지속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신설·운영함으로써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 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 및 정기회 등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5항, 안 제9조 및 제11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노동정책과장,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031-8030-4533, 팩스: 031-8030-2889, 전자메일: khn03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공무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무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안전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을 “도지사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노동국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담당·팀장 직위·성명	공무직운영팀장 구은주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김혜민(8030-453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한다.</p> <p>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 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p> <p>② (생략)</p> <p>제8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생략)</p> <p><신설></p> <p>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p> <p>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 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p> <p><삭제></p>

<p>제11조(회의) ① (생 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p> <p>③ 정기회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자 선정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p> <p>④ · ⑤ (생 략)</p> <p>제22조(채용규정) ① 공무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계약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생 략)</p>	<p>제1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22조(채용규정) ① 도지사는 공무원 ----- ----- -----.</p> <p><후단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	---

붙임 1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붙임 2 현행규정

경기도 공무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2-28 조례 제 4484호
(일부개정) 2013-12-02 조례 제 4651호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1-14 조례 제 4849호
(전부개정) 2016-09-29 조례 제 5339호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7495호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3-07-18 조례 제 7667호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2024-05-16 조례 제 80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차별적 처우”란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한다.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

①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처우 금지)

① 도지사는 공무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고용환경 개선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대외직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급체계 마련 및 공무직원을 위한 장기근속 우대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제7조(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 중 제2호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공무원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개정 2022.12.30.>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회 의원 1명
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3.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1명
4.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원 차별해소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자 선정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안건의 배부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12.30.>

② 담당업무, 전환사유 및 전환제의 사유 등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심의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도지사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예산 등)

도지사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공무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만료일 등)

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예외규정)

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인정 부문은 본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채용규정)

① 공무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계약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권고)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공무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공무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